# 특별법 개정안 시행 2년… 1300명 명예회복

# 제주4·3 76주년

(2) 4·3 직권 재심

유족·피해자 중심서 국가로 법적 구제 절차 한층 변화

까다로운 수형인 일반재판 명예회복 속도는 더뎌… 재심으로 50명만 피해 구제

2022년 3월29일 제주지법 201호 법 정. 재판장이 4·3당시 불법 군사재 판을 받은 수형인 40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4·3피해자들은 '제주4·3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 정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70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4·3특별법은 그동안 피해 자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던 명예회복 절차를 국가가 전담하도 록 해 법적 구제에 한층 속도를 내 는 변화를 가져왔다.

▶4·3특별법 명예회복 속도=형 사소송법(이하 형소법)상 재심은 허위 증거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 을 받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 또는 검사가 고문을 자행하는 등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 실 등이 명확히 증명될 때 청구할 수 있다.





4·3특별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던 명예회복 절차를 국가가 전담하도록 해 법적 구제에 한층 속도를 내는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3일 봉행되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그러나 2021년 6월 개정된 4·3특 별법은 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 가 4·3 당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 았거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 사재판을 받았다면 이런 형소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도록 법무부장 관에게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1948~1949년 사이 군사재 판이 불법 계엄령에 의해 이뤄졌 기 때문에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굳이 형소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피고 인별로 각각 따지지 않아도 국가 가 결정한 4·3희생자이고, 당시 불 법 군사재판을 받았다면 이들 모 두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권고 대 상자로 삼는다는 게 4·3특별법의 취지이다.

4·3특별법은 지난해 8월 한차례 더 개정돼 군사재판 수형인에게 한 정됐던 직권 재심 권고 대상을 일 도 둘 간의 속도 차이는 쉽게 설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가 더 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했다.

설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기준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는 총 1756명(69.4%)다. 또 1756명 중 74%(1302명)가 검찰의 직권 재심 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4·3특별법 시행(2022년 4월) 2년 만에 일궈낸 성과로, 나머지는 피해자 또는 유 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 죄를 선고 받은 경우다.

▶희생자 결정에 갇힌 재심=군 사재판에 비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속도는 더딘 편이 다. 현재까지 누명을 벗은 일반재 판 4·3수형인 134명 중 검찰의 직 권 재심으로 구제된 피해자는 50명 에 그쳤다. 반면 4·3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은 1600~1800명으로 추정되 고 있다.

합수단이 일반재판 직권 재심 업 무를 넘겨 받은 시점이 지난해 2월 또 2차 개정이 지난해 8월 이뤄졌 다는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더라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 재심 전담 조직도 생겼다. 2021 사재판보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 년 11월 재심을 청구할 '제주4·3사 한 재심 업무가 더 까다롭다는 점 법 계엄령에 의해 이뤄졌다는 역사 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수 에서 찾을 수 있다. 수형인의 경우 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일반재판은 단)이, 이듬해 2월엔 재심을 도맡 1999년 발견된 수형인 명부를 기초 그렇지 않아 둘을 똑같은 기준으로 아 심리할 전담 재판부가 각각 신 로 재심 대상을 일과적으로 추려낼 수 있지만 일반재판은 이런 명부가

없어 일일이 한자로 된 판결문을 전부 확보해 번역해야 하고, 또 수 사·재판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는 지 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고된 일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합수단에 배치된 인 원은 검사 3명, 경찰 수사관 3명 등 9명에 불과해 과부하가 우려된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 자가 국가 주도 구제 절차에서 소 외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4·3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자 결정이 있어야 한다.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 서 합수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군사재판에 한정됐다. 2022년 12월 합수단은 군사재판 대 상자 중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 A씨에 대해 형소법을 적용 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례'를 일반재판으로 필요하다"며 난색을 드러낸다.

합수단 관계자는 "군사재판은 불 바라볼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공무원 인기 시들?… 8.9급 경쟁률 '뚝'

#### 제주도 올해 공채 7.2대 1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아

제주도 지방공무원 응시 경쟁률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차지도는 2024년 지방 공무원 8.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17개 직렬에서 244 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1758명이 지원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38명 선발에 1174명이 지원해 경 쟁률 8.5대 1을 기록했으며 서귀포 시는 104명 선발에 555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 직렬 경쟁률을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9 급은 126명 모집에 86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6.8대 1이다.

일반토목 9급은 18명 모집에 77

명이 지원해 경쟁률 4.2대 1, 사회 복지 9급은 15명 모집에 121명 지 원해 경쟁률은 8대 1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2명을 선발하는 제주시 간호8급으 로 55명이 접수해 27.5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7세이 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1074 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지원자 는 55세, 최연소 지원자는 18세이다.

올해 응시 경쟁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다. 제주도는 시험 경쟁 률 하락 요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민간 기업 대비 83.1% 수준의 낮은 급여.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응시 경쟁률은 2004 년 28.6대 1, 2008년 49.9대 1, 2016 년 12.8대 1, 2023년 7.3대 1 등 감 소 추세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운전 중 시비 붙자 둔기로 폭행… 20대 체포

제주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 대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 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 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45 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40대 운전자 B씨의 팔 등 을 둔기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 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갑 자기 끼어들고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 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 "양귀비 불법재배 안돼요" 해경, 4개월간 집중 단속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 가옴에 따라 제주해경이 마약류 범 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비 고해 달라"고 말했다. 닐하우스, 텃밭, 건물 옥상, 화단

등에서 대마·양귀비 밀경작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해경은 선박 이용 마약 류 밀반입. 해양 종사자 마약류 유 통·투약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오 해경 관계자는 "단속용과 관상용 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양귀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 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 진을 찍어 해경에 문의해달라"며 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 고사리육개장 제주몸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몸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